

勞 動 經 濟 論 集  
第22卷(1), 1999. 6, pp. 179~201  
© 韓國勞動經濟學會

## 韓國의 雇傭과 失業: 現況과 展望 \*

金 滉 嶠\*

< 目 次 >

I. 序 論	III. 1999年度 雇傭과 失業 展望
II. 雇傭과 失業의 推移와 現況	IV. 政策課題

### I. 序 論

IMF 관리체제 이후, 한국경제는 지난 반세기동안 누적되었으나 개선되지 못한 갖가지 문제점들이 표면위로 부상함에 따라서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1년여간 경험한 극심한 불황과 각 분야를 걸쳐 전개된 구조조정의 여파는 우리 나라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고용과 실업의 문제는 경제현안의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사회문제의 발원지로 등장하고 있다.

88년 이후 2-3%에 머물던 실업률이 급상승하기 시작하면서 99년 2월에는 8.7%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실업자수가 178만 5천명에 이르렀다.(노동부, 노동통

\* 1999년 2월 노사관계학회, 노동경제학회, 노동법학회 합동 춘계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임.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교수.

계보고서) 이 같이 급격한 실업률의 상승과 실업자의 증가는 지난 1년여간 노동자 계층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실직자의 생활보호와 구직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실업자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전년보다 예산을 대폭 35.7% 늘려 7조 7천억으로 잡았으나, 지난 3월 19일 8조 3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키로 하여 총 16조원에 이르게 되었다.(노동부,1999)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미칠만한 효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고용조정을 감수해야할 것이나, 문제는 어떤 식으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합의를 도출해 내야만 하는 절박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사자들은 동상이몽으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노사관계와 경제 질서 전반이 불안한 형국이다.

## II. 雇傭과 失業의 推移와 現況

### 1. 고용수준과 고용구조

#### 가. IMF 이전의 고용동향

##### 1) 개 관

우리 경제는 80년대 후반부터 97년 11월 IMF 자금지원 신청 이전까지 연평균 7.3%라는 비약적인 높은 성장을 지속해 왔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10년 가까운 기간중 15세이상 인구가 연평균 1.8%씩 증가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88년 58.5%에서 '97년에 62.2%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늘어난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이 무난하게 취업자로 흡수될 수 있었다. 따라서 취업자수가 '88년의 1,730만명에서 '97년에 2,160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연간 실업률은 3% 미만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8년에는 노동공급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5.975로 추락하면서 실업률이 5.6%로 뛰어오르게 되었다.

IMF 관리체제가 시작된 1997년 이전 10년간의 고용구조의 변화를 특징지워 본다면, 우선 노동공급 측면에서 첫째, 남녀고용 차별 완화에 의한 여성의 활발한 노동시장 진출, 둘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취업자의 중고령화, 셋째, 교육에 의한 취업자들의 고학력화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노동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농림어업과 광공업, 제조업의 고용이 감소한 반면, 제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의 고용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는 10년 사이에 고용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둘째, 높은 경제성장에 의해 고용흡수력이 증가하여 노동시장에 상대적인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94년부터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유입되기도 하였다.(김황조, 1999)

〈표 1〉 11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단위 : 천명)

	1988	1992	1996	1997	1998
<b>경제성장률</b>	<b>11.3</b>	<b>5.1</b>	<b>7.1</b>	<b>5.5</b>	<b>-5.9</b>
<b>&lt;전체&gt;</b>					
15세이상 인구	29,602	31,898	34,182	34,736	35,243
경제활동인구	17,305	19,426	21,188	21,604	29,390
(참가율)	58.5	60.9	62.0	62.2	60.7
취업자	16,870	18,961	20,764	21,048	19,926
실업자	435	465	425	556	1,463
(실업률)	2.5	2.4	2.0	2.6	6.8
비경제활동인구	12,298	12,472	12,994	13,132	13,853
<b>&lt;남자&gt;</b>					
15세이상 인구	14,294	15,397	16,590	16,870	17,132
경제활동인구	10,414	11,627	12,620	12,761	12,843
(참가율)	72.9	75.5	76.1	75.6	75.2
취업자	10,099	11,322	12,330	12,409	11,897
실업자	315	305	290	352	986
(실업률)	3.0	2.6	2.3	2.8	7.7
비경제활동인구	3,880	3,700	3,969	4,109	4,849
<b>&lt;여자&gt;</b>					
15세이상 인구	15,308	16,501	17,593	17, 866	18,111
경제활동인구	6,891	7,799	8,568	8,843	8,507
(참가율)	45.0	47.3	48.7	49.5	47.0
취업자	6,771	7,639	8,434	8,639	8,030
실업자	120	160	134	204	477
(실업률)	1.7	2.1	1.6	2.3	5.6
비경제활동인구	8,418	8,702	9,025	9,023	9,6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 2) 여성노동력의 진출

여성노동력이 노동시장에 급속하게 진출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추세로 두드러졌다.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의 증가는 남성보다는 여성에 있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동기간 중에 남성의 취업자는 연 2.3%씩 증가한 반면, 여성은 연 2.7%씩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의 두드러진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취업자 증가에는 다소 이에 못 미친다. 남성의 경우 늘어난 경제활동인구가 대부분 취업하였으나, 여성의 경우는 경제활동인구 증가는 연 2.8%인 반면, 취업자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통계청, 1998년 12월 고용동향, 1991) 그러나 숫자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력의 상당수는 상용직보다는 임시적으로 고용된 경우가 많았다.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남성의 경우 '88년에 상용근로자 비중이 전체 남성취업자의 3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시근로자의 비중은 13.6%였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88년의 20.6%에서 '97년 22.7%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임시근로자의 비중은 '88년에 20.6%에서 '97년에는 27.3%로 약 100만명 가까이 여성 임시근로자가 증가하였다.

&lt;표 2&gt; 성별 취업구조 추이

(단위 : 천명, %)

	1988	1992	1996	1997	연평균증가율 (‘88-’97)
남자	10,099(100.0)	11,322(100.0)	12,330(100.0)	12,409(100.0)	2.3
상용근로자	3,978(39.4)	4,774(42.2)	5,333(43.2)	5,169(41.7)	3.0
임시근로자	1,369(13.6)	1,462(12.9)	1,694(13.7)	1,850(14.9)	3.4
일용근로자	795(7.9)	936(8.3)	986(8.0)	1,019(8.2)	2.8
자영업주	3,638(36.0)	3,911(34.5)	4,121(33.4)	4,187(33.7)	1.6
무급가족종사자	318(3.2)	239(2.1)	196(1.6)	183(1.5)	-6.0
여자	6,771(100.0)	7,639(100.0)	8,434(100.0)	8,639(100.0)	2.7
상용근로자	1,370(20.2)	1,807(23.7)	2,045(24.2)	1,964(22.7)	4.1
임시근로자	1,397(20.6)	1,753(22.9)	2,174(25.8)	2,355(27.3)	6.0
일용근로자	700(10.3)	836(10.9)	811(9.6)	871(10.1)	2.4
자영업주	1,455(21.5)	1,499(19.6)	1,676(19.9)	1,763(20.4)	2.2
무급가족종사자	1,849(27.3)	1,744(22.8)	1,727(20.5)	1,686(19.5)	-1.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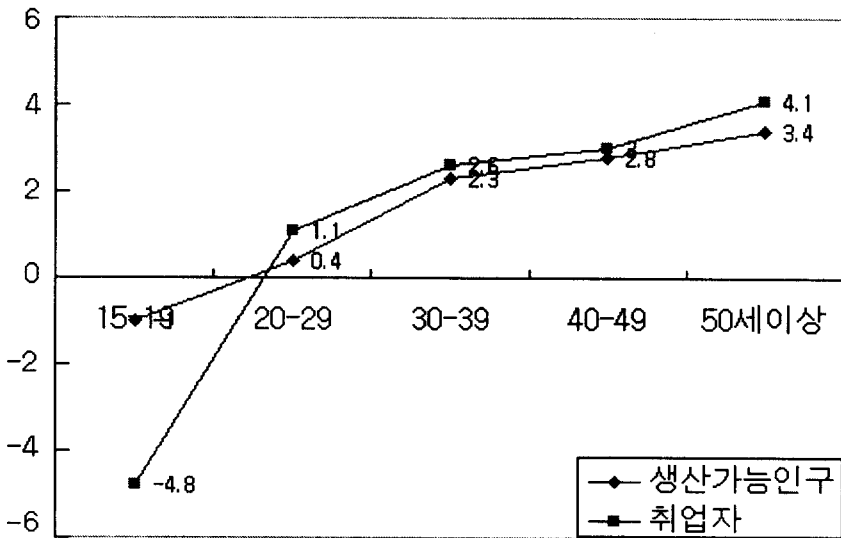
## 3) 생산가능인구의 중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중고령화 현상도 두드러진 형태를 보인다.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생산가능 인구에서 고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15-19세 연령계층의 생산가능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1.0%인 반면, 연령층이 높을수록 증가율이 높아져 50세 이상은 3.4%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취업자수의 연령대별 증가를 보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져서 15-19세의 연령대에서 취업자 증가율은 연평균 -4.8%이었으나 50세 이상은 4.1%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취업자의 연령이 중고령화되면서 기업내의 연령계층별 노동수급간에 괴리가 발생하게 되어 기업의 내부조직과 임금체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대부분 기업이 인구피라미드형 직급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자의 연령대별 구성이 향아리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기업들은 과거와 같은 승진제도와 이에 따른 임금상승을 감당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취업자에 대한 수량적 고용조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경기불황시 주로 신규채용 억제 형태의 고용조정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은 직급간 인력수급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다. 따라서 기업은 팀제를 도입하거나 연공급대신 성과급 위주의 임금체제로 개선할 유인이 커지게 되었다.

[그림 1] 생산가능인구 및 취업자 연령별 추세 : 연평균 증가율('88-'9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를 연구자가 재구성함.

#### 4) 고학력 노동력의 급속한 증가

'80년 초반의 교육개혁 이후 대학의 입학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전 국민의 교육수준은 급속도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고학력자의 비중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88년에 전체취업자중에서 중졸이하의 학력은 52.4%였으나 '97

년에는 36.8%로 줄어들었고, 반면 대졸자는 '88년에 12.2%에서 97년 20.3%로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고학력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학력자의 증가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는 고학력자 임금수준의 상대적 하락, 하향취업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표 3〉 학력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1988	1992	1996	1997	연평균증가율 '88-'97
전체	16,869(100.0)	18,962(100.0)	20,764(100.0)	21,047(100.0)	2.5
중졸이하	8,843(52.4)	8,368(44.1)	7,612(36.7)	7,752(36.8)	-1.5
고졸	5,963(35.3)	7,551(39.8)	9,081(43.7)	9,026(42.9)	4.7
대졸이상	2,063(12.2)	3,043(16.0)	4,071(19.6)	4,271(20.3)	8.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5) 서비스업의 고용증가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중요한 변화는 산업구조 변화와 더불어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이다. 서비스업의 고용비중 증가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기술진보와 생산비중 감소로 농업어업과 제조업의 취업자 비중이 급속히 감소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음에 따라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 분야의 생산비중과 고용비중이 늘어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특이한 것은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비중 증가이다. 건설업의 경우 '88년에 취업자 수가 약 102만명이었다. 그러나 이후 주택 200만호 건설 등 건설 경기의 지나친 붐으로 인하여 '97년에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200만명을 상회하였다.(노동부, 각년도) 더군다나 이 부문에서는 기술진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취업자의 대부분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충원되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이 미미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설업과 도소매숙박음식업에서 대폭적인 고용흡수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저임금 부문에서는 인력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1998년에 와서는 건설업과 도소매숙박업의 고용흡수력이 크게 떨어져 취업자의 절대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도 고용증가율이 -13.2%로 추세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표 4〉 산업별 취업자의 추이

(단위 : 천명, %)

	1988	1992	1996	1997	1998
전체	16,869(100.0)	18,962(100.0)	20,764(100.0)	21,047(100.0)	19,926(100.0)
농림어업	3,483(20.6)	2,991(15.8)	2,405(11.6)	2,324(11.0)	2,424(12.1)
제조업	4,667(27.7)	4,828(25.5)	4,677(22.5)	4,474(21.3)	3,884(19.4)
광업	140(0.8)	63(0.3)	24(0.1)	27(0.1)	20(0.1)
건설업	1,024(6.1)	1,658(8.7)	1,967(9.5)	2,004(9.5)	1,577(7.9)
도소매음식숙박업	3,646(21.6)	4,419(23.3)	5,628(27.1)	5,798(27.5)	5,565(27.9)
기타서비스업	3,909(23.2)	5,002(26.4)	6,062(29.2)	6,421(30.5)	6,457(32.4)

주 : 1) 기타서비스업에는 전기·가스 및 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그리고 공공·개인·사회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이 이에 속함.

2) ( ) 안의 수치는 전체취업자에 대한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6) 대기업의 과잉고용

중소제조업체의 저임금부문 즉, 3-D 업종에서 인력난이 발생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금융부문, 공공부문 및 대규모 제조업체 등에서는 과잉인력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97년 초반에는 일부 대기업에서 대량의 명예퇴직 혹은 조기퇴직을 단행함에 따라 그 동안 당연시 여겨져 오던 평생직장의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당초에 과잉인력 문제는 주로 중장년층 사무관리직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단순히 경기침체에 따른 문제라기보다는 베이비 붐 세대의 중장년화로 인한 기업체 내의 직급간 수급불일치, 이공계보다는 인문계 위주의 인력양성 등으로 인한 노동공급 요인이 경기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IMF 자금 지원이후부터는 경기의 급속한 냉각으로 생산직에게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되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우리나라 기업의 고용조정 실태(II)』(1998) 보고서에 따르면 '97년 3월 조사에서는 '인력이 과잉'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사무관리직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생산직 및 단순노무직이었으며 제일 낮은 부문이 전문기술직이었다. 그러나 '98년 3월의 동일한 조사에서는 당시 '인력이 과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이 생산기능직(28.8%)였으며 그 다음이 사무관리직(27.1%), 단순노무직(22.3%)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업판매직과 전문기술직은 과잉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97년 조사에서 사무관리직 과잉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당시 고용조정을 실

시한 주된 이유가 인건비 절감을 통한 효율적 경영이었으나, IMF 상황 이후에는 경기의 급속한 위축으로 매출액 감소가 심해졌기 때문에 생산직 인력조차도 과잉상태에 놓여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잉인력의 문제는 대기업일수록 심하게 나타났고, 직급별로는 부장 및 차장급 등의 중장년층에서 심하게 나타났다.(한국경제신문사, OMJ보고서, 1999) 과잉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IMF 상황 이후 달라지고 있다. 먼저 1997년 1월-11월 기간의 고용조정현황을 보면, 총 300개 기업 중 32.3%인 97개 기업이 고용조정을 실시하였다. 고용조정의 방법별로 보면, '근로시간 단축'(20.0%)과 '인원수 조정'(19.7%)을 통한 방법의 활용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능적 조정'(12.7%), '임금조정'(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원수 조정 방법으로는 '채용 동결 또는 축소' 방법이 15.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리해고 실시'(7.0%), '명예퇴직 실시'(5.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7년 12월-98년 3월 기간에 이루어진 고용조정현황을 보면 97년 1월-11월에 비해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IMF 상황 이후 경기의 급격한 하락으로 고용조정실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총 300개 기업 중 181개 기업(60.3%)이 고용조정을 실시하여 97년 1월-11월 기간에 비해 28%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고용조정의 방법면에서도 과거와 달리 '인원수 조정'이 43.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임금조정'(38.7%), '근로시간 단축'(36.7%), '기능적 조정'(2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원수 조정에서 특히 '정리해고'를 실시한 업체의 비율이 종전보다 대폭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고용조정의 방법이 고용유지 측면 보다는 감량경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1998)

### 7) 고용형태의 다양화

노동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적정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려는 기업의 경영전략, 정보통신 기술의 급진전 및 여성 노동력 진출의 증가등으로 임시직, 파트타임, 계약직, 파견근로, 재택근로 등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임시직의 경우 '88년에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4%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7년에는 20.0%로 늘어났다. 또한 파견근로의 경우 '92년 6월에 파견근로자수는 27천명으로 추정 조사되었으나, '97년 5월에는 그 수가 225천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한편, '98년 2월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같은 고용형태의 다양화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임금수준을 낮추게 된다는 주장과,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유연화를 기할 수 있어 기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주부, 고령층, 청년층 등의 취업기회가 확대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노



동시장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에 생산성 차이가 없더라도 임금과 고용의 안정성에서는 큰 차이가 있어 왔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고용형태 다양화 과정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제도가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고용형태가 가져오는 부작용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 2. 실업률과 실업구조

### 가. 고용지표와 실업 : 실업률의 급상승

'97년 12월 IMF의 자금지원 결정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표 5 참조). 실업률은 '97년 11월에 2.6%에서 12월은 3.1%, '98년 1월에는 4.5%로 급증하였고, '98년 12월에 이르러서는 실업률 7.9%, 실업자 1651천명을 기록하였다.

〈표 5〉 최근의 고용지표 추이

(단위 : 천명, %)

	1997	1998			
	2/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5세이상인구	34,668 (1.6)	35,070 (1.6)	35,187 (1.5)	35,303 (1.4)	35,410 (1.3)
경제활동인구	21,868 (2.5)	20,892 (-1.0)	21,663 (-0.9)	21,571 (-1.1)	21,432 (-0.9)
취업자	21,319 (1.8)	19,710 (-3.7)	20,178 (-5.4)	19,971 (-6.4)	19,846 (-5.8)
실업자	550	1,182	1,485	1,600	1,586
비경제활동인구	12,799 (0.3)	14,179 (5.6)	13,524 (5.7)	13,731 (5.6)	13,978 (5.0)
실업률	2.5	5.7	6.9	7.4	7.4
(계절조정)	2.6	4.7	6.9	8.4	8.1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동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 각호.

실업률의 악화뿐만 아니라 취업자의 감소세는 더욱 심하여 '98년 4/4분기 취업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5.8%, 취업자수는 1,473천명 감소하였다. 반면에 실직 이후 노동시장에서 구직을 단념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사람도 1,179천명이나 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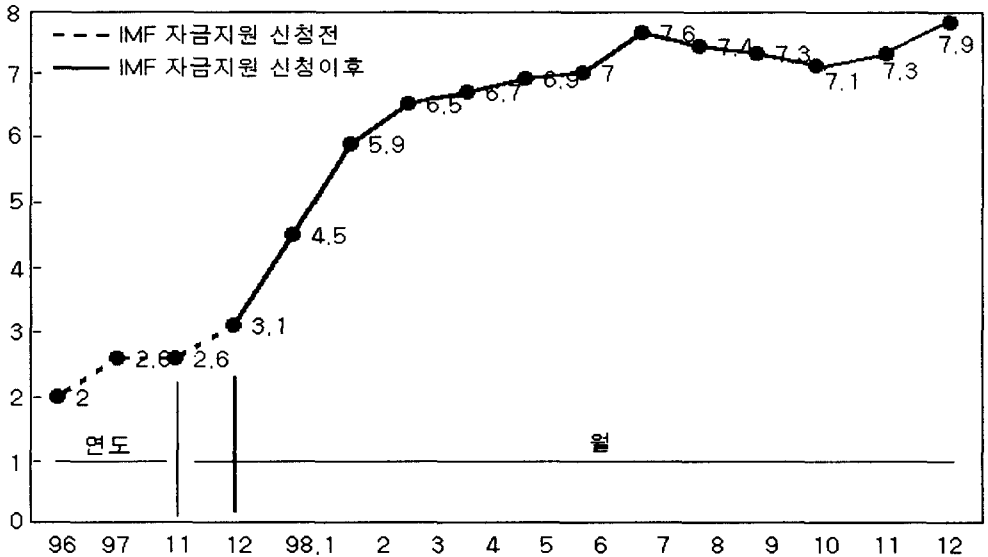
다.

나. 가구주 실업자의 절대적 상대적 증가

실업의 급증과 더불어 실업구조 또한 변화하고 있다. 우선 과거보다 가구주인 사람의 실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98년 3/4분기 현재 실업자 1,600천명중에서 가구주이면서 실업자인 사람이 743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6.4%에 달한다. 이는 '97년 34.5%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으로 볼 때 가출,

이혼, 자살등의 심각한 문제와 연관되어 진다 (표 6 참조).

(그림 2) 최근의 실업률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 각호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함.

더구나 가구주가 실업상태이면서 가구원중에서 취업자가 전혀 없는 경우가 전체 실업자의 약 19.4%로서 약 3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계층은 당장 대책이 필요한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이들 중에서 상당수는 현재 근로소득이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저소득이었던 경우가 많다. 즉, 가구내에 취업자가 전혀 없으면서 실업자인 가구주가 실직되기 이전에도 과거 소득이 불안정적이었던 임시근로자가 약 63천명, 일용근로자 96천명, 무급가족 종사 및 신규실업 또는 1년 이상의 전직실업자가 40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과거에 자영업자였던 실업 가구주는 약 25천명, 상용근로자는 74천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상용근로자들의

경우도 약 80%가 과거 근로소득 수준이 월 150만원 이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저소득 계층의 실업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표 6〉 가구주 실업비중의 추이

(단위: 천명, %)

	1997	1998		
		1/4분기	2/4분기	3/4분기
전체실업자	556(100.0)	1,182(1100.0)	1,485(100.0)	1,600(100.0)
가구주	192(34.5)	515(43.6)	693(46.7)	743(46.4)
비가구주	365(65.5)	667(56.4)	792(53.3)	858(53.6)

주: ( )안의 수치는 전체실업자에 대한 비중임.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과

#### 다. 경기적 요인의 실업증가

현재의 실업은 다분히 경기적인 요인에 의한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예로서 전직 실업자들의 전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98년 7월 현재 임시직 비중이 32.4%, 일용근로자 비중이 30.5%인 반면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20.8%에 불과하다. 또한 전직실업자의 이직이유별 구성비를 보면 정리해고 등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실업자 비중은 '98년 7월 현재 16.8%에 불과하며, 일자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의 악화등으로 인한 실업자 비중이 43.7%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실직한지 1년이 안된 전직실업자의 62.5%는 종업원 10인 미만의 영세규모 사업체에서 과거 일하다가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에서 실직하여 실업자가 된 자의 비중은 5.3%에 불과하다.(재정경제원의 정부 각부처, 1999)

이러한 추세로 볼 때 '98년 상반기까지 급속하게 증가된 실업자의 대부분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라기 보다는 주로 경기의 급속한 침체에 따른 실업자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98년이후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의 가속화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빅딜과 관련하여 실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라. 저학력 실업비중 증가, 고학력의 높은 실업률

일반적으로 실업의 고통은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에게 먼저 닥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의 실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실업자의 비중을 보면 중졸 이하의 실업자 비중이 '97년에 21.4%였으나 점차 늘어나 '98년

4/4분기에는 28.8%에 달하였다(표 7 참조).

<표 7> 학력별 실업자수 및 비중

(단위 : 천명, %)

	1998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전체실업자	1,182(100.0)	1,485(100.0)	1,600(100.0)	1,586(100.0)
중졸이하	316(26.7)	411(27.7)	454(28.3)	457(28.8)
고졸	629(53.2)	755(50.8)	835(52.1)	851(53.7)
대졸이상	237(20.1)	319(21.5)	311(19.4)	278(17.5)

주 : ( )안의 수치는 전체실업자에 대한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 각호.

<표 8> 고학력 실업률 국제비교

(단위 : %)

	실업률(1995)	학력별실업률(1995)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고학력/전체실업률
한국	7.6	6.4	9.4	6.1	80.3
네덜란드	6.9	7.9	4.8	4.1	59.4
독일	8.2	13.3	7.9	4.9	59.8
미국	5.6	10.0	5.0	2.7	48.2
스웨덴	9.2	10.1	8.7	4.5	48.9
스페인	22.9	20.6	18.5	14.5	63.3
영국	8.8	12.2	7.4	3.7	42.0
프랑스	11.7	14.0	8.9	6.5	55.6
핀란드	16.2	21.6	16.1	7.6	46.9
캐나다	9.5	13.0	8.6	6.5	68.4
호주	8.6	8.5	6.2	4.0	46.5

주 : 1) 한국의 실업통계는 1998년 7월 수치임.

자료 : 통계청, 『7월 고용동향』, 1998.8

OECD, Employment outlook, 1998.7

그러나 고학력의 실업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98년 7월에 대졸 이상의 실업률은 6.1%로서 전체 실업률 7.6%에 비교하면 약 80% 수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학력 실업률이 전체실업률의 약

5-60% 수준에 불과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과잉교육 문제가 심각하다 하겠다.

### Ⅲ. 1999年度 雇傭과 失業 展望

#### 1. 고용전망

국내 각종 거시지표의 안정세와 정부의 경기부양 등으로 실물부문의 점진적 회복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1999년에는 구조조정 및 확장적 거시정책의 결과 내수부문의 회복과 더불어 성장률이 플러스가 되리라고 전망되는 바, 민간경제연구소의 예측은 작게는 0.7%, 크게는 1.5%까지 보고 있으나 KDI는 2.2%내외가 되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표 9〉 국내 경제연구기관별 99년 경제전망

(단위: %)

구분	KDI		삼성		현대		LG		대우	
	98	99	98	99	98	99	98	99	98	99
경제성장률	-5.9	2.2	-5.6	1.5	-5.5	0.3	-5.8	2.1	-6.3	0.5
실업률	6.8	8.0	6.8	7.0	6.8	8.0	6.9	8.4	7.0	8.1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4/4분기)」, 1998  
 삼성경제연구소, 「최근의 경제동향 및 99년 경제전망」, 1998  
 현대경제연구원, 「1999년 산업전망」, 1998  
 LG경제연구원, 「99년 경제전망」, 1998  
 대우경제연구소, 「분기별국내경제전망」, 1998 4/4 - 1999.4/4

〈표 10〉 KDI 경제전망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비 %)

	1998p	1999p
국내총생산	-5.9	2.2
총소비	-10.9	2.5
총고정투자	-26.2	-1.6
소비자물가	7.5	1.6
생산자물가	12.3	-2.6
상품수지	421	305

주 : 1) 1998년 1월부터 IMF 신기준에 의한 국제수지표 편제계획에 의거하여 국제수지 통계항목이 일부 변경되었음. 이 중 무역수지는 수출입상품을 상품특성별로 세분화 하여 상품수지로 변경되었음.

2) p는 전망치임.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4/4분기)」, 1998. 12.

또한, 1999년에는 경기가 소폭 회복(약 2%내외 성장)되어도 노동공급의 순증가분을 흡수할 여력이 적기 때문에 실업률은 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가 1999년에 서서히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고 일자리 창출사업 등 정부가 실업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경우, 2/4분기 이후부터는 고용사정이 다소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에서는 1999년도 연평균 실업자를 163만명, 실업률을 7.5%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하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의 자료를 중심으로 1999년도 고용과 실업의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 11〉 1999년도 고용전망

(단위 : 천명, %)

	1997	1998	1999p
경제성장률	5.5	-5.9	2.2
15세이상인구	34,736(1.5)	35,243(1.5)	35,673(1.2)
경제활동인구	21,604(2.0)	21,390(-1.0)	21,713(1.5)
참가율	62.2	60.7	60.9
취업자	21,048(1.4)	19,926(-5.3)	20,080(0.8)
실업자	556	1,463	1,632
실업률	2.6	6.8	7.5

주 : 1)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KDI 자료임.

2)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3) p는 전망치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 가. 노동공급 전망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활동참가율은 그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1990년대 초반까지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와서는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여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1998년에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경제활동참가율이 60.7%를 기록하여 1997년보다 크게 하락하였다. 1998년은 내수침체로 인한 고용흡수력 둔화, 극심한 구직난으로 인하여 실망노동자효과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여성노동력, 특히 저학력층 여성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1998)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1999년도에도 노동공급에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주로 생산가능인구의 순증가분이 경제활동인구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1999년도 경제활동참가율은 60.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노동부 고용정책과, 1999)

### 나. 노동수요 전망

1999년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0.8% 증가한 20,080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신한종합연구소, 1999 한국 대전망)반면에 고용탄력성은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1999년에는 노동시장이 보다 유연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향후 고용형태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종합해볼 때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0.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다. 분기별 실업 전망

분기별로는 신규 졸업예정자들의 노동시장진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1/4분기에 실업자수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실업자수는 점차 하락하겠으나, 정부의 실업대책 효과에 따라 1/4분기 실업자수의 크기와 이후의 하락추세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999년 2/4분기부터는 IMF 자금지원 신청이후 처음으로 전년동기 대비 취업자가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신한종합연구소, 1999 한국 대전망)

〈표 12〉 분기별 실업률 전망

(단위 : 천명, %)

	1999p				
	연평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실업자	1,632	1,759	1,638	1,552	1,581
실업률	7.5	8.3	7.5	7.1	7.2

자료 : 최강식, 전재식, 『1999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9. 1.

## 라. 실업구조 전망

1999년도 실업구조는 정부의 실업대책의 효과와 노동수요, 그리고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이전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1) 대다수 기업들의 신규채용 축소 내지 억제로 신규졸업예정자들의 취업난이 극심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청소년층의 실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하여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의 하향취업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사정까지도 위협하는 하향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 3) 실업기간에 있어서 장기실업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 마. 연령계층별 실업구조 전망

청소년층 실업의 주요 특징은 고학력화로 인한 노동력 수급상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1999년도에 발생할 청소년층 실업의 원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채용 규모 축소, 파트타임 기회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가 1999년도에는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대부분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계층인 15-29세 청소년층이 차지하는 실업비중은 1998년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13〉 연령별 실업자 전망

(단위 : 천명, %)

	1998	1999p
전체	1,463(100.0)	1,632(100.0)
15-19세	85(5.8)	101(6.2)
20-24세	257(17.6)	294(18.0)
25-29세	268(18.3)	302(18.5)
30-39세	360(24.6)	401(24.6)
40-54세	379(25.9)	416(25.5)
55세 이상	113(7.7)	118(7.2)

주 : ( )안의 수치는 전체실업자에 대한 비중임.

자료 : 최강식, 전채식, 『1999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9. 1.

한편, 졸업예정자의 연령층 대부분이 청소년층에 속하기 때문에 졸업예정자의 실업문제는 청소년층 실업과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1999년 1/4분기중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약 2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4〉 '99년도 졸업예정자의 경제활동상태 전망(2월 기준)

(단위 : 천명, %)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졸업예정자	771	224	306
경제활동참가자	218	178	242
취업자	159	111	111
실업자	59	67	131

주 : 1) 교육부, 『교육통계연보』를 토대로 추정된 것임.

2) 대졸이상에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타대학 및 대학원졸업예정자가 포함됨.

자료 : 최강식, 전채식, 『1999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9. 1.

#### 바. 성별 가구주별 실업구조 전망

실업자중 가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 실업자는 46.4%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정책이 시행될 경우 가구주 실업자는 비가구주 실업자보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남자의 경우는 가구주 실업자 비중이 비가구주 실업자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겠으며, 반면 여성의 경우는 비가구주 실업자 비중이 높을 것이다. 한편 여성은 취업상태에서 실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비경활상태로 머무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표 15〉 성별, 가구주유무별 실업자 전망

(단위 : 천명, %)

		1998	1999p
전 체		1,463(100.0)	1,632(100.0)
남 자		986(67.4)	1,108(67.9)
	가구주	580(39.6)	656(40.2)
	비가구주	406(27.8)	452(27.7)
여 자		477(32.6)	524(32.1)
	가구주	88(6.0)	101(6.2)
	비가구주	389(26.6)	423(25.9)

주 : ( )안의 수치는 전체 실업자수에 대한 비중임.

자료 : 최강식, 전재식, 『1999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9. 1.

사. 학력별 실업구조 전망

신규채용의 억제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계층의 취업난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실업난으로 인한 이들 계층의 하향취업은 저학력 무기능계층의 고용사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경기가 다소 호전되더라도 고졸이하 무기능계층의 실업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졸이하의 실업자가 전체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에 비해서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표 16〉 학력별 실업자 전망

(단위 : 천명, %)

	1998	1999p
전 체	1,463(100.0)	1,632(100.0)
중졸이하	410(28.0)	452(27.7)
고 졸	767(52.4)	849(52.0)
대졸이상	286(19.6)	331(20.3)

주 : ( )안의 수치는 전체 실업자수에 대한 비중임.

자료 : 최강식, 전재식, 『1999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9. 1.

아. 전직실업구조 전망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1999년에도 지속되겠는데, 직장을 잃는 전직실업자수가 1,447천명을 기록하면서 1998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1999년 중 전체 전직 실업자에서 상용 및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56.5%, 일용직의 비중은 27.2%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기업의 고용형태가 상용직 등 정규직 중심보다는 비정규직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고용창출 정책은 우선적으로 일용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일용직 전직 실업자의 비중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표 17> 중사상 지위별 전직실업자 전망

(단위 : 천명, %)

	1998	1999p
전 체	1,348(100.0)	1,447(100.0)
비임금근로자	217(16.1)	236(16.3)
상용근로자	291(21.6)	331(22.9)
임시근로자	449(33.3)	486(33.6)
일용근로자	390(29.0)	394(27.2)

주 : 1) 전직실업자를 이직시기에 따라 1년 미만과 1년 이상 전직실업자로 분류하며 이 중 이직시기가 1년 미만인 전직실업자에 대해서만 실업구조를 파악함. 따라서 이직시기가 1년이상인 전직실업자의 경우는 전직장에서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 미만 전직실업자의 비중을 대입하여 1년 이상 전직실업자의 구조를 파악함.

2) 비임금근로자 항목에는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이에 속함.

3) ( )안의 수치는 전직실업자에 대한 비중임.

자료 : 최강식, 전재식, 「1999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9. 1.

## IV. 政策課題

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의 급증에 따라 정부는 고용유지(job keeping), 고용창출(job creation), 직업훈련(job training)과 취업알선(job placement), 그리고 실업자 생활보호(social care)를 중심으로 하는 실업문제 종합대책을 98년 3월에 마련하였다.

고용유지대책은 흑자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기업의 고용유지노력을 지원하여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융, 재정상의 지원과 고용보험제도를 통한 지원이 있다.

고용창출대책은 공공투자사업, 공공근로사업, 창업지원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자를 흡수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사업을 통해서 실업자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구인, 구직연계체제를 확충하여 실업자의 재취직을 도모하고 있으며, 실업자 생활보호는 실업급여 및 각종 지원, 보호, 대부사업, 공공근로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같은 실업대책을 위해서 정부는 '98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10조 707억원의 실업대책비중 9조 6,307억원을 집행하였다.(노동부 고용정책과, 1999) 98년 후반기에 들어 계속 상승하던 실업률은 다소 안정세를 보였지만 실업률의 안정은 아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는 고용보험을 전사업장에 적용하는 등 이를 보장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직업안정기관 및 취업알선기관의 활동은 두드러지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반면에 저소득 실업자의 소득지원등 후생적 차원에서 시작한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부적격자의 참여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직업훈련은 양적확대 위주로 운영되어 내실화된 훈련시스템이 아니라는 지적도 받았다.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부만이 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각 부처가부처별 종합 실업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99년에는 각 부처별 사업을 통하여 고용창출형 성장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조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용효과가 높은 지식기반 산업, 주요 서비스 산업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튼튼한 경제적기반을 마련기 위해서는, SOC 투자를 매년 확대하되 고용유발효과가 큰 정보, 통신, 전력, 환경시설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지난 몇십년의 성장과정동안 도외시되어 온 벤처기업 육성에 특별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한다. 벤처기업의 성공은 관련산업과 기업에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산출하고 해당 지역의 서비스업까지 번창시킬 뿐만아니라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시킬수 있기때문이다. 99년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인데, 98년의 대책을 보강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 예산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실업대책의 골격은 이미 1998년 실업대책에서 상당부분 골격이 갖추어져 있으나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아직도 아직도 미약하다고 보여진다. 물론 고용보험의 대상과 지원규모가 크게 늘어났고,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범위 역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사회안전망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빈약하므로 사회안전망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정퇴직금을 합산해도 한국의 사회보장지출은 96년말 현재 GDP의 5.3%로 스웨덴(38.0%) 등과는 비교도 안되고 일본

(12.4%)과 비교해 보아도 그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이다.(고경환, 계훈방, 1998)사회 안전망을 건실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제도를 확충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집중 시행하여 장기실업자, 청소년실업자의 지원 및 3D업종 등 취약부문의 인력지원 수단으로 활용하며, 생활보호사업을 실업자보호사업과 빈곤구제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업자보호사업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소득이전 차원의 대책 이외에도 현재 각종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개별정책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상태에 있는데, 효율적인 실업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각 정책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향후 실업대책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보다는 기존 프로그램의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작업이 더욱 중요하다.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 5,416억원이 투입되어 98년 10월 현재 수혜인원이 240천명에 달하기는 하지만, 이 가운데 17%만이 재취업을 하였을 뿐이다.(김황조, 1999) 훈련프로그램이 노동시장의 수요나 실직자의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시장수요를 감안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실직자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제도의 개발 등 실직자 직업훈련체제의 종합적인 개선이 요청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용안정센터와 인력은행의 시설, 인력 및 전문성으로는 족족하는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 및 직업안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해 나가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감한 개선책이 요청된다. 98년 12월말 현재 고용안정센터와 인력은행은 119개소에 불과하고, 일용직 고용서비스요원 1,558명을 포함하여 4,054명에 불과하다. 이 중 직업상담원은 1,367명에 지나지 않는바,(재정경제원의 정부 각부처, 1999) 금년 대학 졸업실업자들의 일부를 대폭훈련시켜 민간 상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그동안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상당히 진전이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 노동시장 유연화를 저해하는 법이나 관행들이 남아있다. 유연화하면 정리해고 등 수량적인 유연화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업단위의 내부노동시장에서 임금체계의 유연화, 퇴직금 제도의 유연화, 계약직, 시간제 근로, 재택근로,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기능적 유연화도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지금재벌들간의 '빅딜'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어 고용승계, 고용보장문제와 관련하여 해외에서도 이를 주시하고 있다. '빅딜' 관련기업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전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고용문제에 대하여 노·사·정이 그 기본원칙을 합의해 두었어야만 했다 빅딜을 제대로 처리하고,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할 고용안정문제를 합의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사정위원회가 IMF 관리체제초기에

는 어려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나 현재 기대했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빅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의도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 합병을 이루고 난 후, 합리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고용조정을 단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노사정위원회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고 하겠다.

“협상결렬에 따른 노조의 파업과 공권력투입, 돌과 최루탄에 쇠파이프와 진압봉이 춤을추는 격렬한 공방전, 무더기 정리해고와 구속, 야당의 정치집회에 몰려가는 빅딜반대 노동자들,…” 이것은 어느 일간지 특별취재단이 한국노사문화를 요약한 것이다. 이 묘사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노사문화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고용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노사문화를 파괴하여 새롭게 창조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OECD, Employment Outlook, 1998. 7.
- 고경환, 계훈방, 『OECD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1998.
- 김황조, 「노사안정과 실업대책」, 연세대학교, 1999.
- 노동부, 「노동백서」, 각년도.
- \_\_\_\_\_,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노동부 고용정책과, 「'99년 및 중기실업대책 구상」, 1999. 1.
- 대우경제연구소, 「분기별 국내경제 전망 : 1998. 4/4 - 1999. 4/4」, 1998. 12.
-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전망 1999」, 1998. 9.
- \_\_\_\_\_, 「최근의 경제동향 및 99년 경제전망」, 1998. 12.
-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통신행정연구소, 「직업안정 및 고용보험 관리조직의 재구축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8. 5.
- 신한종합연구소, 「1999 한국대전망」, 1998. 12.
- 재정경제원의 정부 각 부처, 「'99년 종합 실업대책」, 1999. 1.
- 최강식, 「노동시장 : 지난 10년의 회고와 21세기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1998.
- 최강식, 전재식, 「1999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9. 1.
- 통계청, 「1998년 12월 고용동향」, 1999. 1.
- \_\_\_\_\_,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한국개발연구원, 「99년도 거시경제정책 운영방향 정책토론회」, 1998. 12.
- \_\_\_\_\_, 「KDI 경제전망(4/4분기)」, 1998. 12.
- 한국경제신문사, 「OMJ 보고서」, 1999. 1.
- 한국노동연구원, 「고실업시대의 실업대책」, 1998. 10.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위기와 노동운동」, 1998.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 \_\_\_\_\_, 「주요경제지표」, 각호.
- 현대경제연구원, 「1999년 산업 전망」, 1998. 10.
- \_\_\_\_\_, 「IMF 경제정보」, 1999. 1.